

KLTA NEWS + 2012

명품소나무 대량생산 연구 본격화

산림과학원, 인공교배로 우량품종 생산채비 "형질개량효과 80%까지 향상"

천연기념물인 속리산 정이품송이나 영월 관음송, 설악동 소나무 등 모양 좋고 역사성도 높은 명품 소나무의 형질을 이어받은 우량 소나무 생산연구가 본격화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구길본)은 우리나라 대표수종인 소나무를 세계적 명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교배를 통한 우량품종 생산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는 명품소나무의 혈통을 보존하고 부모 세대의 뛰어난 형질이 융합된 우량품종(자식)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품종개발 연구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수종개량연구팀은 이미 지난해 우수한 혈통을 지닌 명품 소나무에서 꽃가루(화분)를 채취하고 어머니나무로 사용할 수형목도 선정했다. 이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정이품송 등 명품소나무에서 채취한 화분을 강원139호 등 우수한 어머니나무에 인공교배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량 소나무를 인공교배시켜 얻은 자식나무는 일반 소나무는 물론 어머니나무에 비해서도 유전적 형질이 개량돼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육종과 한상익 박사는 "생산된 명품소나무 차대 묘목들은 일반 소나무보다 생장력이 탁월해 유전적 개량효과가 50~60% 높아질 것"이라며 "산지에 조성된 차대묘목 중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골라 대량 보급하면 형질개량 효과를 전체적으로 80~90%까지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해안경관 조망공간' 16개 완공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한 전망대·조망쉼터·보행길 조성...지역별 특색따라 조망공간 마련

국토해양부가 16개 지자체와 함께 추진해 온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을 완공하였다. 진귀한 형태의 주상절리가 천혜경관을 이루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일원에는 조망시설을 조성하였다. 읍천항과 하서항 사이에 조망테크, 쉼터 등 조망공간을 꾸미고 두 항구 간 1.7km의 산책로를 주변환경에 맞게 몽돌길, 야생화길, 등대길 출렁다리 등으로 꾸며 산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태배해변이 있는 서해쪽에는 석양을 바라볼수 있는 조망공간을 마련하고, 기존 군부대 시설을 리모델링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비한 전망대를 설치하여 보행테크와 전망공원을 꾸몄다. 또한 거제시 남부면에는 전망대와 보행테크로 해금강과 한려해상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완도군 신지면에는 신지대교, 명사십리 해수욕장, 다도해 일출공원 등 주변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완도와 주도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조망쉼터와 보행길을 조성하였다. 이 밖에도 동해, 당진, 강진, 여수, 순천, 고흥, 보성, 광양, 남해, 통영 등에 위치한 다양한 형태의 조망공간을 통해 지역별 특색있는 해안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위치, 교통정보, 인근 관광지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홈페이지(www.cola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가 이번에 완공한 해안경관 조망공간은 경주, 태안, 거제, 완도, 부산 등 16개 지자체가 총 90억원

(국고보조 45억원)을 투입했으며, 해안권 7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후, 각계 전문가의 서면 및 현지 평가 등을 거쳐 지역별로 해안경관의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국토부는 또한 이번에 완공된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 외에도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 해안마을 미관개선,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 등의 해안권 발전 시범사업을 '14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 녹색도시 프로젝트 중점 추진

내년부터 국비 600억 투입돼...5·18광장·행복타운·문화특구 등 7가지 사업

광주광역시와 10일 민선 5기 후반기 2년 동안 도시공간의 녹색화 분야에서 중점 추진할 '빛고을 초록별 일곱자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광주시에 프로젝트를 보면 ▲구도청·금남로 일원 '5·18 민주·평화 녹색광장' ▲예술과 효가 살아 숨쉬는 '녹색행복타운' ▲푸른길 주변 '그린 복지타운' ▲시민이 만들고 가꾸는 '빛고을 산들길' ▲지산동 '남도전통문화특구' ▲주월초교 녹색 리모델링을 통한 '광주하계U-대회' 활용 ▲영산강 첫사랑 '영산강 물길 80리' 기틀마련으로 설정했고, 이 7가지 건설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 세계적인 환경도시다운 도시 녹색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5·18광장과 금남로 일원은 차량출입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친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민주토론광장, 각종 문화행사, 시민여가공간으로 제공되며, 앞으로 건립될 문화의 전당과 함께 광주의 상징 경관지구이자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는 잔디를

식재하고 분수대 둘레에 원형의 실개천을 조성, 금남로거리는 '몽마르뜨' 언덕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변모된다.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세부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행복타운'은 공영개발방식이 적용되며, 타운개발과 운영은 국제현상설계 등을 통해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을 금년에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2014년에 착공하게 된다.

푸른길 주변 '그린 복지타운'은 슬럼화된 영세주택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지 7700㎡에 저층형 국민주택 등 250여세대 공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아파트 공급 재개발 방식에서 전면 탈피해 신재생 제로하우스 개념을 도입한 건물 신축하고 바람길과 빗물저장시설, 녹색 치유숲, 옥상텃밭 등 자연과 공생하는 친환경 시설물과 문화활동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등을 조성해 국내에서 최초로 녹색 개념을 도입한 '창조적 도시재생'을 이룩해 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또 도심의 산과 산을 잇는 특색 있는 구간별 테마 둘레산길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과 소통, 여가활동공간으로 제공한다. 도심외곽 순환 81.5km구간(삼각산·잣고개·금당산·용봉동·어등산·백우산·진곡·비아·삼각산)이 둘레산길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시민이 만들고 가꾸는 '빛고을 산들길'을 위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산들길 조성 경관디자인예술사업단'이 추진 주체를 이룬다.

이 외에도 침체되어 있는 무등산 자락 지산유원지 주변(282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도전통 오감자원

을 활용하여 뛰어난 음식점, 한옥과 남도정원 등 문화시설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남도전통 문화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U-대회 선수촌 공사장 중앙에 위치한 주월초등학교를 친환경 녹색건축물로 리모델링하여 U대회 기간중 선수촌 관리본부 및 홍보관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영산강 80리 일원 5대 거점구간에는 가족피크닉 랜드(시민의 숲, 공원), 강변친수 체험공간(시민광장, 청소년 자연휴양 공간), 예술의 숲(어울림 터, 빛팔십리), 생태복원시범공간(물 스포츠 공원, 생태축복원), 하천 경관공원(경관작물, 연인의 길)이 만들어지며, 지속가능한 수변 생태축을 조성해 시민들을 친수공간·생태체험과 자연 여가공간으로 제공한다.

이번 프로젝트 사업은 내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될 600여억원 국비가 투입된다.

그린벨트 내 야구장·산림욕장 설치 추진

개발제한구역법령 입법예고...여가시설 종류 확대·주택 개량 비용 지원 등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농구장이나 잔디야구장, 야영장, 산림욕장 등이 여가시설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 까지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생활체육시설(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잔디축구장 등), 도시공원,

휴양림 등의 여가시설을 허용하고 있었지만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다양한 여가수요를 충족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민이 다양한 여가를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내 여가시설의 허용종류에 농구장, 야영장,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에 대해 증축 및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했지만 새로운 대지조성을 허용하지 않아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하는 공장의 경우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의 경관 개선과 한옥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노후 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부지를 택배화물 분류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현황

구분	구역내 기 허용시설	추가 허용시설
실외 생활체육시설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기타 이와 유사시설	농구장, 잔디야구장 (명문으로 규정)

휴식공간시설	도시공원, 자연공원, 공공공지, 녹지,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칠봉, 평행봉, 기타 체력단련시설, 휴양림, 수목원, 잔디광장, 피크닉장 등	아영장, 산림욕장, 치유의 숲
--------	---	------------------

하반기 공공기관 조경공사 대거 발주

LH·수공·도공·SH공사 등 대규모 공사이어져 '관심 집중' 계속되는 건설경기 불황 속에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도로공사, SH공사 등 주요 4대공사의 조경공사 발주 건이 조경업체를 비롯 대형 건설사에게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LH의 경우 하반기에만 9000억원 대에 이르는 조경공사 발주가 예정돼 있어 이를 수주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다.

SH공사는 올해 조경공사 발주 대부분(1271억원)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고 한국도로공사도 하반기에 269억원 규모의 발주가 진행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사업 중 78%가까이 상반기에 집중 발주됐지만 하반기에도 460억원대의 송산철새서식지 조성공사, 750억원 규모의 시화MTV 1~3공구 조경공사 등 대규모 공사가 대기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의 하반기 발주계획 물량은 총 8928억원으로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다.

LH의 올해 발주예정 조경공사는 모두 138건, 예정공사비만 1조36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4건, 4529억원 규모의 공사가 발주 집행됐으며, 이달부터 연말까지 102건, 9100억원 규모의 조경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다.

50억원 대 미만의 공공임대 및 분양 아파트단지 조경공사 뿐 아니라 대부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인 혁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조경공사가 앞으로 30여건의 공사가 추가 입찰 될 예정이다.

LH가 시행하는 9개 혁신도시 내에서 22개 공구로 나눠 발주된 혁신도시 조경공사 중 광주전남혁신도시 2공구와 제주혁신도시 1, 2공구 조경공사는 지난 달에 계약이 체결됐다.

이어 이달 11일 경남혁신도시 조경공사 1공구(추정가 200억원), 충북혁신도시 조경공사 1공구(추정가 232억원), 대구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 1공구(추정가 169억원), 전북혁신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2공구(추정가 198억원) 발주가 진행, 개찰결과를 두고 낙찰자를 심사 중이다.

이외에도 이달 울산혁신도시(202억원)을 비롯해 인천청라 4-2공구(300억원), 의정부민락2 1공구(280억원) 조경공사와 다음달 경남혁신 2공구(260억원), 전북혁신 1공구(215억원) 발주가 계속될 예정이다.

국토부, 하천 텃밭 조성 '원천 금지'

하천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경작 목적 하천점용 공공기관도 허가금지

국토해양부가 국가하천 주변의 '텃밭' 조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하천법 개정에 나섰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국가하천 주변에 신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 지난 3월 서울시가 추진하려 했던 이촌한강공원 '텃밭 조성사업'과 하천지구의 텃밭 조성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 점용에 대한 공

공기관 등과 개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정비된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에 대해서도 국공유지에 대한 신규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단 하천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2008년 4월 이전 점용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경작권이 인정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하천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르면 개인이 하천변 국공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다만 점용허가 신청인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엔 가능하다. 각 지자체장이 점용 허가권자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점용신청을 하고 허가를 내는 방식이다.

개정안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 단서 조항이 담긴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을 삭제, 개인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게도 신규 하천 점용허가를 원천 금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 간 점용권을 거래하고 사유화하는 등 하천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 난개발에 따른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지자체가 직접 경작하는 사례도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서조항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보였던 지난 3월 이촌한강공원 내 텃밭 조성 사업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하천법상 개인들의 농작물 경작 금지 규정과 한강공원특화사업으로 하천점용허가서 사용 목적에 텃밭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가 추진하던 이촌한강공원 내 텃밭 조성을 중지 시킨 바 있다.

결국 서울시는 국토부의 강경한 제동으로 텃밭 조성 계획을 이촌공원에서 노들섬과 용산공원으로 옮겨 조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한강공원 일대에 공동체 텃밭 조성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던 서울시로서는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토부의 하천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추진하던 한강공원 내 텃밭 조성 계획은 무산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존에 조성된 노들섬 도시농업공원의 텃밭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될 것 없다'이다.

노들섬의 경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정됐기 때문에 하천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청 공원녹지국 관계자는 "노들섬 조성 당시부터 방벽을 설치해 물에 잠기지 않는 땅으로 육지와 같은 개념"이라며 "특히 전임 시장 당시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기로 계획됐기 때문에 용도가 유원지에서, 문화시설로, 지금은 제2종 일반 주거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의 이촌공원 텃밭 조성 중지명령 당시 노들섬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국토부와도 법적 문제 여부를 확인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